

2014년 7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행정학 총평 이상헌 교수[아모르이그잼 부산캠퍼스]

2014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해설

[해설에 앞서]

국가직 7급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7급 시험은 출제 교수님들께서 변별력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쉽게 출제된 문제는 최근의 쉽게 출제되고 있는 9급 시험들에 견주어도 될 만큼 짧고, 쉽게(핵심 키워드에서 오답이 가려지는)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이 출제된 법령 문제들이 행정학 과목의 고득점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치러진 국가직과 지방직 9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계약직과 기능직 폐지 후 도입된 인사행정 파트의 다양한 개정 법률이나 국가재정법 조문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소 지엽적인 문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 법률의 시행이 2013년 3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정 법률이 시험에 출제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인사행정 파트의 개정 법률 내용들을 내년 시험 전까지 정리를 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상대적으로 이번에 출제된 소청심사위원회 조문 내용은 내년에 다시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아지겠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이런 흐름을 잡아가며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7문항의 법령 문제를 얼마나 확인하고 있었느냐, 또는 행정학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유추할 수 있었느냐가 행정학 점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모든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인데, 짧은 시간의 풀이 후 고득점을 얻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명확하게 갈려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법령 문항은 일반 이론 수업 시간에 세세하게 풀어 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시험 전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과 특강 등을 통해 보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엽적인 출제의 서울시 7급 보다는 국가직 7급의 출제 테마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방직 7급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7급 시험 출제위원 교수님께서 참고하실 문제은행 Pool은 이번 국가직 시험 출제 교수님께서 참고하셨던 문제은행 Pool과 동일하니까...) 이번 국가직에서는 출제교수님께서 법령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대신 이론 문항을 평이하게 출제하셨는데, 지방직에서는 다른 교수님께서 출제를 들어가시는 만큼 다시 이론부분을 소홀하게 정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시험이 7급 시험치고는 이론이 쉽게 출제된 편입니다.

실전 같은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지방직 7급) 3개월 앞에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실전모의고사(국가직 7급)에서 확인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목표하는 실제 시험(지방직 7급)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역별 출제 비중 및 출제 테마 정리]

출제 영역	출제 비중	출제 테마
행정학의 기초이론	4, 20%	• 공공재(서비스)의 특징 • 행정가치 • 신제도주의 접근방법 • 뉴거버넌스
정책학	4, 20%	• 정책유형론 • 무의사결정론 • 정책결정 모형 • 정책평가의 의의와 방법
조직행정	3, 15%	• 조직구조론 • 네트워크 조직 • 정부조직 구조의 이해
인사행정	3, 15%	• 공무원 임용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재무행정론	3, 15%	• 기금 • 전통적 예산원칙(한정성 원칙)의 예외 •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행정론	1, 5%	• 지방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행정환류론	2, 10%	• 공직부패와 행정통제의 유형 • 전자정부의 효과

1.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정답 || ②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바탕으로 등장한 뉴거버넌스는 시장 - 정부 - 시민사회의 네트워크(Network)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한다.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네트워크의 구성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 국정운영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간 정치적 협상 과정이 중시된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인해 행정 연구에 있어 조직 간 분석을 바탕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의 유지와 사회적 자본, 협상과정에서의 가외성, 공익 과정설의 관점 등이 중요 관심 분야로 대두되게 된다.

2.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 ㉡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
| ㉢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 ㉣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
| ㉤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 ㉥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 ④

- ㉠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경쟁 상황 속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강제퇴출을 명하는 경쟁적 규제정책(X)
 ㉡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정책(X)
 ㉢ 최저임금제도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일반 대중(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정책(O)
 ㉣ 정부조직의 변경은 구성정책(O)
 ㉤ 공항, 항만, 도로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분배정책(O)
 ㉥ 국가의 일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X)

※ 정책유형별 특징

① 재분배정책

의의	- 부 · 소득 · 재산 · 권리 등을 집단 간에 이전시키는 정책 - 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실행 되는 정책
사례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임대주택 사업 등
특징	① 특정 소수의 비용부담(주로 고소득층) - 특정 집단(저소득층)의 수혜 - 비용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명확하여 갈등 수준이 높음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영합게임(Zero sum game)의 양상 ② 최고 결정권자(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 - 공적 재원의 활용이 아닌 비용부담자가 명확하므로 강력한 저항 발생 - 계급대립적 성격으로 인한 집단 간 갈등 조정 필요

② 분배정책

의의	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각종 재화나 서비스 · 이익 · 지위 · 기회 등을 분배하는 작용
사례	항만 · 도로 ·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국 · 공립학교 운영, 공원 조성 등
특징	① 불특정 다수의 비용부담(주로 일반국민의 조세) - 불특정 다수의 수혜

	• 비용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아 갈등 수준이 낮음 • 분배정책의 실시에 대해 상호불간섭 내지는 상호 수용의 상황으로 전개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비영합게임(Non-zero sum game)의 양상
	② 정책 과정 상 정치 행태 •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이 더 많은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유통 정치(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등의 행태가 나타남
	③ 정책과정의 특징 • 집행 과정에서 갈등 정도가 낮아 표준운영절차(SOP)가 확립되기 쉬움 • 최고 정책결정권자 보다는 관료 또는 하위정부에 의한 결정이 주로 나타남 • 정책 순응도가 높고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높음

③ 규제정책

의의	•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사례	•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등					
특징	①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됨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집단 간 갈등이 높음 • 각 자 정치적 연합체를 구성하여 갈등 · 타협하는 다원론적 정치과정 양태					
	②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					
	<table><tr><td>Lowi</td><td> •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 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결정 됨 </td></tr><tr><td>Posner</td><td> • 정부규제는 특정 집단을 돕기 위하여 다른 집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 과세의 형태로서 성격을 가짐 </td></tr></table>	Lowi	•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 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결정 됨	Posner	• 정부규제는 특정 집단을 돕기 위하여 다른 집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 과세의 형태로서 성격을 가짐	
	Lowi	•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 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결정 됨				
	Posner	• 정부규제는 특정 집단을 돕기 위하여 다른 집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 과세의 형태로서 성격을 가짐				
	③ 규제정책의 유형					
	㉠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					
	<table><tr><td>경쟁적 규제정책</td><td> • 다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 • [예] 통신사업 허가, 항공노선 취항 허가 등 </td></tr><tr><td>보호적 규제정책</td><td> • 국민 대중의 보호를 위해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소수의 비용부담 - 다수의 편익수혜 상황에서 수익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므로 정책도입을 위한 공익 집단의 역할 필요 • [예] 소비자보호법, 각종 요금 규제, 독과점 금지 관련 법률 등 </td></tr></table>	경쟁적 규제정책	• 다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 • [예] 통신사업 허가, 항공노선 취항 허가 등	보호적 규제정책	• 국민 대중의 보호를 위해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소수의 비용부담 - 다수의 편익수혜 상황에서 수익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므로 정책도입을 위한 공익 집단의 역할 필요 • [예] 소비자보호법, 각종 요금 규제, 독과점 금지 관련 법률 등	
	경쟁적 규제정책	• 다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 • [예] 통신사업 허가, 항공노선 취항 허가 등				
보호적 규제정책	• 국민 대중의 보호를 위해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소수의 비용부담 - 다수의 편익수혜 상황에서 수익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므로 정책도입을 위한 공익 집단의 역할 필요 • [예] 소비자보호법, 각종 요금 규제, 독과점 금지 관련 법률 등					
㉡ 자율적 규제정책						
<table><tr><td>의의</td><td> •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td></tr><tr><td>특징</td><td> • 주로 전문성을 갖춘 집단에게 자율성과 함께 필요한 규제권한을 동시에 부여 </td></tr><tr><td>사례</td><td> • [예] 변호사회의 자체 징계권, 건축사회의 자체 징계권 등 </td></tr></table>	의의	•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특징	• 주로 전문성을 갖춘 집단에게 자율성과 함께 필요한 규제권한을 동시에 부여	사례	• [예] 변호사회의 자체 징계권, 건축사회의 자체 징계권 등
의의	•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특징	• 주로 전문성을 갖춘 집단에게 자율성과 함께 필요한 규제권한을 동시에 부여					
사례	• [예] 변호사회의 자체 징계권, 건축사회의 자체 징계권 등					

④ 구성정책

의의	• 헌정 수행을 위한 운영규칙으로서, 국가 권력 수행을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정책
사례	• 행정부처 및 법원의 관할구역 설정, 예산기관이나 인사기관의 설치 등
특징	① 정치행정체제 대내적 영향력만 가질 뿐, 대외적 영향력은 없음 ② 안정된 정치체제일수록 변화가 적으므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음

⑤ 추출정책

의의	•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인적 ·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
사례	• 조세제도, 병역 징집, 물자 수용 등

⑥ 상징정책

의의	• 정치 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을 제고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하는 정책
사례	• 애국가 제창, 국기 게양 등

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 정답 || ①

- ① 징계로 인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피임용권 제한 됨
- ② 근무경력(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은 승진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질서유지에 기여하지만 개인의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직자의 의욕 감퇴로 인한 조직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근무경력과 함께 실적기준을 활용하여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 ④ 징계에 의한 강등과 달리 강임의 경우 본인의 동의 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가능하다.

강임	① 의의
	• 하위 등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강임은 동일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
	② 구별개념
	• 공무원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강등과 달리 강임은 직제와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한 폐직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능함

4.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 ② 공금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 ③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정답 || ②

② 거래형 부패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부패(뇌물수수 등)를 의미한다. 공금의 횡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 부패 수단에 따른 공직 부패 유형

직무유기형 부패	• 시민이 개입되지 않은 공무원 단독의 부패 • 직접적이며 명백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형태 [예] 공무원의 복지부동
후원형 부패	• 공무원이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 후원을 하는 부패
사기형 부패	• 공무원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을 통한 부패
거래형 부패	• 공무원과 시민이 뇌물(물질적 수단)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불법적으로 받는 형태

① Gilbert의 행정통제 유형

구분	외부	내부
공식적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계층제 조직, 감사원,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비공식적	시민참여, 이익집단, 정당, 여론에 의한 통제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요건	① 19세 이상의 국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를 통하여 ②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③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단,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청구하여야 함
감사청구 제외 대상	①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②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단,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청구 가능) ⑤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 정답 || ③

③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한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각각 존재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중앙부처 1~3급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부 직위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선기관이므로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한다.(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 세무직렬 시험 합격자이며, 지방직 세무직렬 합격자는 시·군·구청에 소속되어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함을 예로 기억할 것)

6.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 정답 || ③

안전행정부 설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비상임위원은 필요시가 아닌 의무적으로 설치)

■ Fly High!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설치
구성	① 안전행정부 설치 소청심사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정무직)

	②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자격	① 임용자격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안전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반드시 위 ㉠과 ㉡ 중에서 임명할 것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분 보장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기타	•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음

7.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정답 ||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집행의 통제 방안 중 하나로서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 예산집행의 통제 방안

의의	• 재정민주주의 확보를 위해 예산의 지출 목적과 지출 범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것
예산배정 및 재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의 배정 및 중앙관서 장의 재배정 과정을 통해 지출 시기와 규모 통제
정원·보수 통제	• 「공무원 총정원령」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확대를 방지

총사업비 관리	•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조세지출예산	•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을 통해 조세 감면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
기록 및 보고	• 각 중앙관서는 자체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를 기록하고, 기획재정부에 월별 · 분기별 · 회계연도별 결산을 보고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
계약의 통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계약 방법과 절차를 규정, 일정액 이상 계약에 대해 상급기관의 승인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경제적 ·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8.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예비비 편성 ② 추가경정예산 ③ 특별회계 운용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정답 || ③

③ 특별회계는 단일성원칙과 통일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전통적 예산원칙의 예외 정리

전통적 예산원칙		예 외
공개성 원칙		국방비, 국가정보원 예산, 국가안전보장관련경비
명확성(명료성) 원칙		총액(총괄)예산
사전의결 원칙		준예산, 긴급재정경제처분, 예비비 지출, 전용, 사고이월
정확성 원칙		적자예산, 흑자예산
한정성 (한계성)	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 전용, 이체
	초과지출금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기한경과금지 (회계연도 독립)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지출, 조상충용
통일성(국고통일) 원칙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
단일성 원칙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완전성 원칙(포괄성, 총계예산)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현물출자, 차관물자대

9.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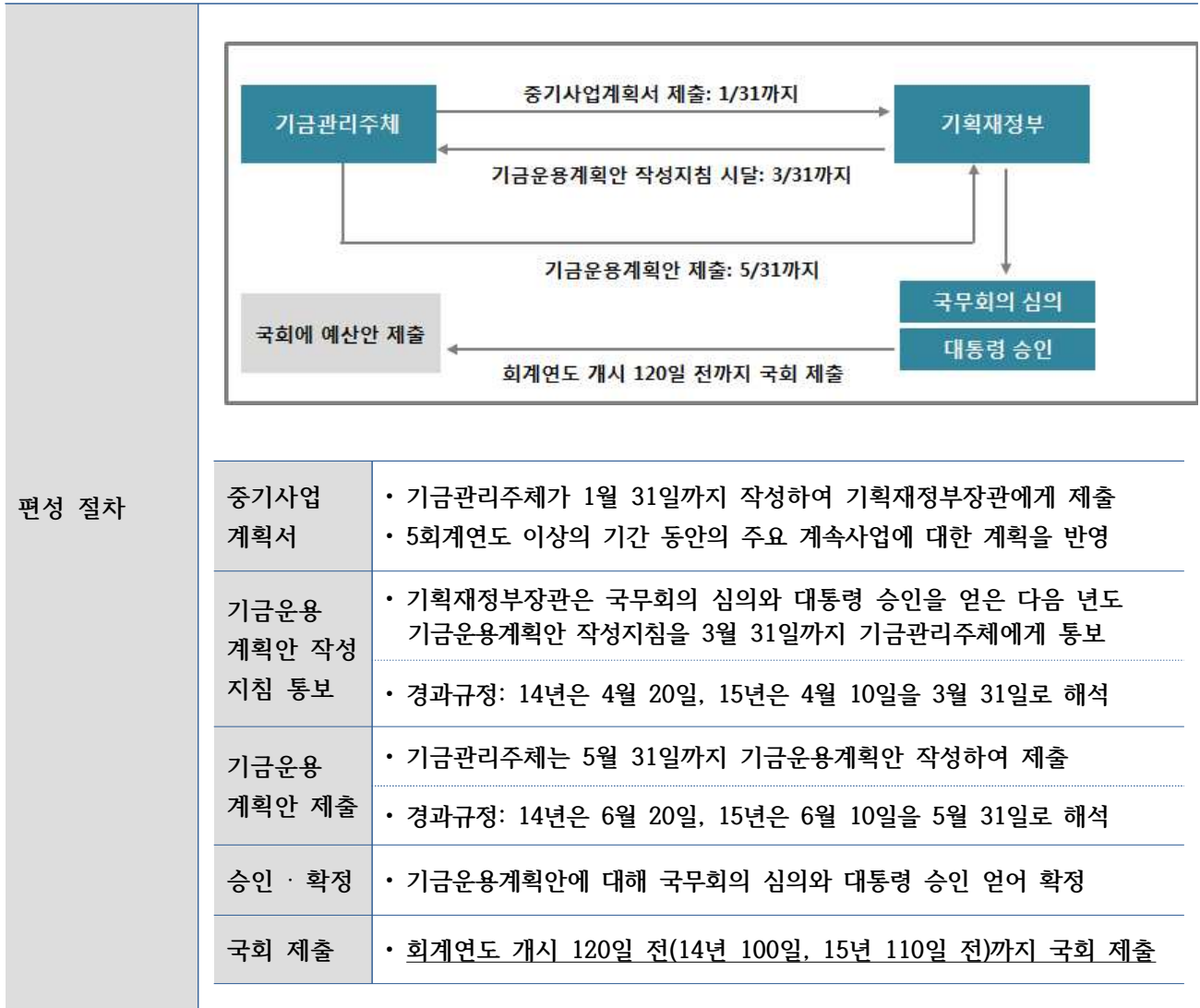
없다.

-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 정답 ||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함

※ 기금편성 절차



1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 ② 공익 실제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③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 ④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답 || ④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 정의

의의	• Aristotle는 “정의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서 불공정(unjust)은 불평등을, 공정(just)함은 평등(equal)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의를 평등의 개념으로 환원 • J. Rawls는 정의를 공평(fairness)으로, H. Sidgwick은 권리와 자유 ·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를 이해
가정	※ 정의의 원리 설정을 위한 가정: 원초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① 인지상의 조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무지하여야 함 ② 동기상의 조건: 상호무관심적 합리성 • 타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의사결정 ③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원칙: 최소극대화(Maxmin) 기준 •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최악의 상황에서의 이익극대화 추구
정의의 원칙	① 정의의 제1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principle of equal liberty) • <u>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u> ② 정의의 제2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차등조정 원리) i. 기회균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직무와 지위 등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함 ii.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 기회균등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Maxmin 기준에 따라 최소 수혜자(최극빈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익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 경우의 차등조정(불평등)은 정당화 됨 ③ 정의의 원칙 간 우선 순위 •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 기회 균등의 원리 > 차등 조정의 원리 순으로 우선함
평가	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 기본적 자유의 원리를 우선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사고를 전제로 하되, 차등 조정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와의 조화를 시도 • 이에 대해, 우파(R. Nozick)로부터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좌파(Nielson)로부터는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함 ② 가정에 관한 비판

	• Rawls가 세운 원초적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가정이 가지는 비현실성 비판
	③ 현실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의 비판
	• 차등 조정으로 인한 불공평 배분의 치유가 사회 전체적 후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11.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
- ② 조직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 ③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능도가 낮아진다.
- ④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 정답 ||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직무 간 · 기능 간 경계를 줄여주며, 이로 인해 Linden 이 제시한 이음매 없는 정부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 전자정부의 도입과 행정의 변화

관리적 변화	① 중간관리자의 감소, 하급 직원의 감소, 지식근로자의 수 증가 ② 중간관리층의 감소에 따른 낮은 행정능도 ③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능률성 강화, 직무 수행에 있어 높은 완성도의 요청
구조적 변화	① 조직 구조의 저층화와 수평적 구조화 ② 이음매 없는 조직과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실현 ③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변화 대응적 조직 구조
대외관계 변화	① G2G: 정부조직 간 전자적 연계의 확대를 통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② G2B: 정부와 기업 간 연계 확대로 전자상거래 촉진, 전자조달을 통한 투명성 강화 ③ G2C: 정부와 시민 간 연계 확대로 참여 촉진과 대응성 강화, 서비스의 신속성 확보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 엘리스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 ②

㉠ 점증모형은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기존정책 대비 소폭의 변화를 추구 함(○)

점증모형의	① 제한된 합리성 상황에서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	----------------------------

특징	•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제한적 합리성)를 인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
	② 목표-수단의 상호의존성(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
	•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보고, 목표에 따른 수단 선택뿐만 아니라 수단선택 과정에서 목표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
	③ 부분적 · 단편적 · 순차적 · 연속적 결정
	• 모든 대안을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씩을 순차적으로 검토
	④ 부분 최적화(sub optimization)를 통한 전체 최적화의 추구
	• 정책목표의 최적화가 아닌 하위 수준의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하고 부분최적화를 통해 상위목표의 최적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제시
	⑤ 소폭적 변화 · 연속적 과정
	• 기존 정책 $\pm \alpha$ 식의 변화 폭에 있어서 소폭적이지만 지속적 변화를 추구
	⑥ 이전투구식 정책 결정 과정(muddling through)
	•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인해 비합리적 이전투구식 정책 과정 전개

㉠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는 합리모형이며, 만족모형은 몇 개의 대안에 대한 무작위적·순차적 탐색 진행(X)

만족모형의 특징	① 제한된 합리성의 행정인
	•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완전합리성의 경제인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의 행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
	②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 탐색
	• 모든 대안에 대한 탐색이 아닌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
	③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 시켜 중요한 요소만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 예측
	• 현실적 요인을 반영하여 상황의 단순화와 중요 요소만을 고려한 결과 예측 이루어짐
	④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 결정
	• 최적 대안의 선택이 아닌 '그럭저럭 만족할만한 수준'에서의 대안 선택이 이루어짐

㉡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에 해당(O)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	① 비목적적 · 적응적 · 습관적 의사결정
	•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어떤 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용하는 비목적적 · 적응적 · 습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② 단순화에 의한 불확실성의 통제
	• 환류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사전 설정 범위를 벗어났는가에 대한 판단만을 통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행동반응목록(SOP)에서 찾아내어 대응

	③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
	조직모형·회사모형·Allison 모형Ⅱ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다양한 목표를 가진 하위부서들의 연합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이 제기되지 않으면 프로그램화 또는 표준운영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듯이 적응적이고 습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짐을 강조
	④ 시행착오적 학습의 강조
	- 분석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으로서 합리모형과 가장 대비 됨 - 합리모형에서의 인과적 학습이 새로운 정보에 따른 목표와 수단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도구적 학습으로서 시행착오적 학습(대안의 채택 - 결과 확인 - 대안의 변경)이 강조되어 학습 과정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프로그램목록이나 SOP는 쉽게 변경되지 않는 특징을 보임

㉢ Allison 모형이 아닌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X)

쓰레기통모형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의 기회의 흐름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님
	②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우연한 기회에 의한 결합(정치적 · 극적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의 발현)을 통해 4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③ 의사결정 방식
	-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갈등의 해결 또는 준해결 -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 진뻐기 결정, 날치기 통과 등

13.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 ③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하며, 수평적 · 수직적 · 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④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를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정답 || ③

- ① 높은 공식화는 관료제 구조의 특징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애드호크라시는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낮은 공식화, 높은 분권화, 낮은 수직적 분화(수평적 구조)를 특징으로 함
- ②, ④ 의사결정 권한이 분배 정도는 집권화이며, 공식화는 업무처리 방식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 함

14.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 ②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③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④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 정답 || ①

네트워크 조직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공동의 조직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한계를 가진다.

※ 네트워크 조직

개념	•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사이의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 • 네트워크 조직을 가상 조직이나 임시 조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구분하는 견해가 있음 • 조직 간 연계성(Network)을 통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 • 중심부는 계획 · 관리 · 조정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공동화 조직(Hollow org.)
대두 배경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 및 동원해야 할 자원의 편재
기본원리	① 공동의 목적 지향, ② 독립적인 구성원, ③ 자발적인 연결, ④ 역량 있는 다수의 지도자
특징	① 가상조직, 임시체제로서의 속성
	•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상황 변화에 따른 계약관계의 조정을 통한 대응
	② 의사결정체제의 분권성과 집권성
	• 독립적 구성원에게 자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분권성) •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관리(집권성)
	③ 통합 지향적 조직
	• 공동의 목표 추구를 추구 • 팀 간 경쟁과 팀 차원의 성과관리 강조
	④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
	•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 간 수평적 상호 조정을 통한 업무 수행
	⑤ 정보 기술의 활용
	• 네트워크 참여자 간 상호 작용을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
장점	⑥ 환경과의 상호(교호) 작용의 다원성
	• 다양한 참여자와 유동적이며 모호한 조직 경계
	⑦ 물적 자원의 축소
	• 조직 규모는 물적 자원이 아닌 네트워크 크기로 파악
장점	① 조직구조의 간소화: 핵심 기능만을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족 ②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신축적인 대응 가능 ③ 유연성과 자율성이 높은 조직구조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실현

	④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한 자율적 · 참여적 직무수행과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 ⑤ 학습과 정보 공유의 확산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향상 ⑥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⑦ 사회적 유대와 상호 신뢰의 구축에 기여
단점	① 구성 부분 간 갈등 가능성의 존재(리더십의 중요성 부각) ② 네트워크 참여자의 잦은 교체(명확한 인수인계 절차의 필요) ③ 신뢰 부재 시 공동 목표 달성 어려움 ④ 대리인 문제의 발생과 외부 통제 비용 증가 우려(사회적 자본 축적 필요) ⑤ 잠정적 관계와 유동적 인사 배치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감 증폭 ⑥ 독자적인 조직 문화 형성 곤란(※) ⑦ 네트워크의 폐쇄화 및 네트워크 간 경쟁 심화 우려

15.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 정답 || ④

※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비교

개념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시대	• 1880년대 이후	• 1980년대 이후
제도의 개념	• 공식적인 법령과 기구	• 공식적인 법령과 기구 및 사회 내 공유 규범
연구 방식	• 현실의 제도에 대한 단순 기술	• 제도를 통한 정치·행정·사회 현상 설명
제도의 형성	•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	• 제도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제도 연구	•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정태적 분석	• 제도 발생과 변화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구제도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외생적 제도 형성)에 대한 정태적 서술에 그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16.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 ㉡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 ㉠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 ④

- ㉠ 무임승차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한다.(O)
 ㉡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에 따라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 정부책임이 완화되고, 민영화 등을 통한 시장에 의한 공급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O)
 ㉢ 상하수도나 지역의 교통관리와 같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지방공공서비스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최저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X)
 ㉣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의 직접 공급보다는 보조금 지급(공적 유도)이나 정부규제로 대응해야 한다.(X)
 ㉤ 전기와 고속도로는 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배제성을 가지므로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비경합성의 특징과 독점 공급의 초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게 되며, Savas의 분류에 따를 때 이러한 재화를 요금재(유료재)라고 한다.(X)

위 보기 지문 중 옳지 않은 내용으로만 연결된 것은 ④번에 해당한다.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과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 정답 || ③

③ 정책평가의 목적

목적	① 정책결과와 집행에 대한 정보 제공
	- 정책 결정 추진 및 정책 수단의 수정 · 보완을 위한 정보 제공 - 효율적 정책 집행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②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집행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확인 및 강제 - 집행담당자의 관리 책임 및 정책 담당자의 정치적 책임 확보
	③ 정책집행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학문적 기여

①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대안 간 비교 및 결과예측 과정은 정책분석에 해당한다.

정책평가의 구별개념	① 정책분석과의 구별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분석을 포함하며,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남

	•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 결정 후 집행과정이나 집행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며, 정책분석은 정책 결정 전 정책대안의 예측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의미
	② 감사와의 구별
	• 감사는 정부 활동 전반에 대한 회계 검사 및 합법성 위주의 감찰 활동을 의미

- ②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은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집행의 결과를 측정함에 있어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 활용하는 질적(주관적) 측정 방법에 해당한다.
- ④ 인위적 실험과정의 설계를 통해 진행되는 진실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 확보에 용이하지만, 현실 적용가능성과 외적 타당도 확보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사회과학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 설계가 주로 활용된다.

18. 바흐라츠와 바라츠(P. Bachrach & M.S. Baratz)의 무의사결정(non - 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②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
-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 ④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

|| 정답 || ①

무의사결정은 폭력과 권력, 편견의 동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은 물론 의사결정 규칙의 변경과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 진행된다.

※ 무의사결정론(신Elite론)

의의	• Bachrach & Baratz: 1960년대 흑인폭동을 계기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결과
내용	①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
	• 권력의 밝은 측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권력의 어두운 측면: 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의도적 은폐와 억압을 위한 권력 행사 • R. Dahl의 실증연구에 대한 비판: 권력의 밝은 측면 밖에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
	②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
	• 권력의 어두운 측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설명 • 지배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이슈가 정책의제화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억압·은폐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 • 협의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최근에는 광의의 의미로 정책의 전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 됨 • 폭력과 권력, 지배적 규범을 통한 편견의 동원, 규칙과 절차의 변경을 통한 유리한 상황 조성(간접적 방식) 등의 수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침

19.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 정답 || ②

- ② 국가보훈처는 차관급 기구로서, 국가보훈처의 장(처장)을 차관으로 임명하며 차관은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급인 처장 바로 아래 직위이므로 과거에는 1급으로 현재는 직무등급이 (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① 국무회의는 의장(대통령), 부의장(국무총리)과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함
- ④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여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장에 해당하며,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 국장 등은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 정답 || ①

|| 해설 ||

- ①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아닌 재산과세 중심이며, 이 때 거래과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보유과세(재산세)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보유과세였던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며 국세로 전환(2006년)된 후 거래과세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 ② 지문의 내용은 재정자립도에 해당함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재정력지수가 1 이상일 때 재정건전성 우수
재정자립도	• 총 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지방세수입+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총액}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좋으나 건전성 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③ 재정자주도에 해당

재정자주도	•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세입 예산}
-------	--

④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용용도(비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방교부세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비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에 해당한다.(반대로 연결)